

# 13일 韓 변론준비·14일 尹 변론기일...헌재 탄핵심판 속도

### 신임 재판관 2명 임기 시작 8인 체제 가동...재판 준비 절차 박차 헌재재판관 전원 회의 대행 임명권 헌법소원 등 대응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어서 헌법재판(헌재)에 다시 한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가세해 8인 체제를 구축한 헌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기일을 잡은 것이다.

이는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 변론준비기일은 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과 같이 양측을 불러 정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한 총리는 지난달 27일 '비상계급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요건이라고 밝혀 재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직의원 3분의 2(200석)' 이

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한 총리도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14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재는 6일 8인 체제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헌재재판관 전원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 모두가 현재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양측이 제출한 각종 서면과 증인 신청 등을 검토하면서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2회씩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준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은 다음달 4일까지 다섯 차례 지정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정확히 어느 기일에 나설지는 미정이지만, 지속적으로 헌재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는 첫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박대출, 조배숙 의원 등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접 출석할 경우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 관련 혐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를 막아서 집행이 무산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체포 막겠다”...관저앞 몰려간 국힘 의원들

### 30여명 집결 “함께 끝까지 싸우자” 지도부는 “개인 차원의 행동” 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관저앞에는 김기현·윤상현·조배숙·박대출·김석기·김정재·이만희·임이자·권영진·유상범·이인선·강승규·박성훈·임종득 등 의원 30여명이 모였다.

이들 중 일부 의원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공수처를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다면,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공수처 발부 받은 영장은)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

소송법의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히 무효로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의 관저 앞 집결과 관련해 ‘개인행동’이라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영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관저 앞에 모인 것으로 안다”며 “지역의 요구에 따른 개인 차원의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 당직자는 “여러 의원이 관저 앞으로 갔다고 해서 그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저 앞에 모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윤종균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체포영장을 막겠다고 관저에 간 것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최종적 문안 정리는 당 법률위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앞서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내란용호죄 등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민주 “경호처발 2차 내란 가담말라”...尹 신속 체포 촉구

### 공수처·경찰에 영장 집행 요구 “최상목 권한대행 방조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요구하고 나섰다.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가 막지 못하도록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우야 한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라도 법 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영장 집행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내란수괴와 공범들은 철조망과 차벽으로 관저를 요새화해 법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영장 집행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법치주의는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경찰은 명심하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체포영장 집

행을 촉구하고자 이날 오전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방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야기한 공수처를 향해서는 ‘무능의 극치’라는 평가를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이 농사지고, 추수해서 곳곳에 곡식 널으면 공수처가 먹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신 나간 공수처”라고 비난했다.

박수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폐지의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내란 스프레드를 들춰처럼 퍼뜨리는 내란 비호세력인 국민의힘, (국정) 수습을 방지하는 최 권한대행의 책임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직무 유기를 일삼는 것은 실제 권한대행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언급했다.

한 최고위원은 “정 실장은 ‘경호처의 제1경호대장이 윤석열이다’라며 경호처 입장을 거둬고 나섰다”면서 “경호처발 2차 내란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현 사국에 대한 진단과 대응을 공유하고자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그에 대한 중진 의원들의 지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최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추미애 의원은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형사고발뿐 아니라 탄핵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체포를 최우선에 뒀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 얘기는 성급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주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학과	30 / 5
	한국어교육학과	1 / 1
사범	복지상담융합학부	24 / 5
	유아교육과	8 /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 8
	총계	84 /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www.kwangshin.ac.kr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 36